

미취학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정책 인지도와 이용의향: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의 차이를 중심으로*

김은정**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 이용의향이 일가정양립 지원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일가정양립정책의 방향 설정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가정생활에 요구되는 시간을 지원해주는 시간지원방식과 가정노동을 서비스로 대체해 직장생활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현행 일가정양립정책을 구분하고,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집단 중 하나인 미취학자녀 양육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의향, 그리고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미취학자녀를 둔 취업여성들은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중 시간지원정책보다 서비스지원정책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용의향도 더 높았다.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간지원정책 인지도에는 취업여성 개인의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친 반면, 서비스정책 인지도에는 직장환경적 특성이 큰 영향을 미쳐서 차이를 보였다. 정책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차이가 있었다. 주변으로부터 자녀양육에 관한 도움을 받지 못할수록 시간지원정책 이용의향이 높은 반면, 이러한 자녀양육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서비스지원정책 이용의향은 높아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직장환경적 요인은 서비스지원정책 이용의향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시간지원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제어: 일가정양립정책, 시간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 미취학자녀양육 취업여성

I. 문제제기

최근까지도 일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만 간주되거나 가임기 취업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을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적 해법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이 급부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가정양립을 수월하게 해주는 사회정책들은 가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C00003)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ejkim@kmu.ac.kr)

정생활과 노동생활을 함께 영위하며 살아가는 대다수 성인노동자들에게 중요하다. 최근에는 대다수 성인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를 확대하는 등 일가정양립정책의 범위가 넓어지고는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 고용불안정이나 노동강도가 점점 증가되는 현재의 시장노동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정책을 통한 지원이 크게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일가정양립정책은 근본적으로는 일상의 균형유지라는 측면에서 모든 시장노동참여자에게 중요할 수 있지만, 일차적인 정책대상자로서 기혼 취업여성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들 집단이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기 때문이다. 고용불안정의 악화와 비정규직의 증가는 기혼여성의 시장노동참여 필요성과 가능성 모두를 증가시켰고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원돌봄을 중심으로 한 가정노동의 주책임자로서의 기혼여성의 일-가정 역할수행에 대한 압박은 현실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손문금, 2005). 보육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가족원 돌봄을 공식적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경향은 최근에서야 확대되기 시작했고, 휴직제도나 근무유동제도 등도 제도화의 사각지대에서 상당부분 머물러 있다가 최근 들어서야 법제화나 내실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¹⁾

일가정양립정책 중에서 주로 기혼 취업여성에게 초점을 두고 실행되는 사업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장노동참여자가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나 가족원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시간을 지원해주는 방향과, 가족원 돌봄욕구가 사회적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시장노동참여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향이다. 시간을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은 시장노동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일가정양립정책의 핵심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²⁾은 이렇듯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공유하지만, 제공되는 급여의 형태에서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책실행의 구체적인 효과도 다를 수 있다. 시간지원정책은 정책대상자로 하여금 직접 가족원 돌봄을 가능케 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노동생활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시간지원정책은 정책내용 상 현재 시장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장노동으로의 정상적 복귀나 시장노동에서의 생산성 유지 등이 핵심적인 정책 이슈이다.

1) 2012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은 휴가제도(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와 노동시간조정지원제도(유연근무)를 대표적으로 포함한다.
2) 시간지원정책은 “일→가족 갈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 영역의 정규성을 수정하여 가정 영역의 요구에 부응토록 한다. 반면 서비스지원정책은 “가족→일 갈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돌봄을 매개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 상호작용을 줄여서 시장노동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서비스지원정책의 경우 가정노동을 타인이나 외부 조력자를 통해 수행가능토록 함으로써 시장노동참여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시장노동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지원되기도 하나, 보육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이 현재는 급여대상 선정시 기혼여성의 시장노동참여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비스지원방식은 잠재적으로 기혼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지원정책의 주요 이슈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신뢰성)관리, 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의 방식과 정도 등이다.

이상과 같이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의 특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책대상자들의 선호도나 이용의향, 관심 등이 두 가지 방향의 정책에 대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정책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환경적 특성, 그리고 직장환경 등이 어떠한가에 따라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이 달라질 수 있다. 정책대상자의 특성별로 시간지원과 서비스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볼 때, 일가정양립 정책 대상자들 중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시간과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나 요구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취학자녀 양육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 이들의 양육스트레스나 심리적 복지감 문제를 다루는데 집중되어있으며(고효정, 이은주, 1998; 박성옥, 1997; 성혜영, 2010), 일가정양립 가능성이나 정책적 요구도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수의 일가정양립정책 관련 논문들이 이러한 정책들이 출산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박찬화, 2012; 이명석 외, 2012; 정성호, 2012),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는지(박효진, 은선경, 2012)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미취학 자녀 양육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을 위한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의향의 차이, 관련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정책을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으로 구분³⁾하고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이 이러한 정책 사업을 어느 정도나 인지하고 어느 정도의 이용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시간지원과 서비스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의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가정양립 욕구를 가장 절박하게 갖는 집단 중 하나인 미취학자녀 양육 취업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일가정양립정책 설계 시 기초자료

3) 현금지원정책을 일가정양립정책의 하나로 보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현금지원은 가족정책이나 저출산정책의 중요한 급여로 포함될 수 있으나 일가정양립정책의 급여로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은 노동력의 상품화 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현금지원정책은 탈상품화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김은정, 2012). 종합적으로 보면 일가정양립정책은 시간지원을 통한 재가족화(re-familization)와 서비스지원을 통한 탈가족화(de-familization)를 모두 시도하여 노동력상품화를 유지, 증진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지원과 서비스지원정책만을 일가정양립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한다.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미취학자녀 양육 취업여성과 일가정양립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기 시작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취학자녀를 한 명이상 양육하는 취업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는 집단이 되고 있다. 기혼 취업여성이 일가정양립과 관련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정일과 직장 일을 모두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시간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6세 이하 자녀 돌봄이다(보건사회연구원, 2009; 통계청, 2008). 장시간 노동이나 비정규적 고용형태 등도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가장 우선적으로 이들의 일가정양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취학자녀의 유무라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이정은, 2010; 장영은 외, 2011)에서 제시되었다.

이처럼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은 이들이 가정생활영역에 대한 시간소비의 필요성을 가장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취학자녀로 인해 증가되는 이러한 요구는 거의 대부분 여성이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양육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 연구(이영환, 이수재, 2007; 조주은, 2009)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여부와 관련 없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돌봄에 대한 직접적 욕구가 가장 높은 미취학자녀 양육기에도 여전히 남성의 가족돌봄이나 가사노동시간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의 경우 가능하다면 여타의 가족원, 친지, 이웃 등과 같은 외부의 비공식적 관계망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욕구를 가진다. 미취학자녀 양육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보육과 교육서비스 선택 양상을 연구한 선행연구(안재진, 김은지, 2010)에 따르면, 자녀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가족원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친인척보육을 이용하려는 욕구가 크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기관이용보다는 비공식관계망을 통한 자녀양육을 선호하는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김은정,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러한 비공식적 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여성이 많지는 않으며, 특히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취업여성일수록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수혜하는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혜중, 장진경, 강유미, 2007).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원천은 직장으로부터의 지원이다.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어느 정도나 확립되어 있는지를 포함하여 특히, 미취학자녀 양육 여성에게는 직장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지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등을 포함한 조직문화적 차원에서의 일가정양립지원 노력은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국고지원의 미비나 법정규정 미이행시 벌칙 실효성 미비 등으로 설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 근로자의 종사 비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보육시설 미설치율이 더 높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업여성이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조주은, 2009; 홍승아 외, 2009).

이상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은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즉, 직장일로 인해 가정생활 영위에 필요한 시간부족이나 갈등을, 그리고 동시에 가족역할 수행으로 인해 직장생활에서의 시간부족과 갈등을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방향적인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래에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일가정양립정책: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개념정의 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정책적 관점에서 어떠한 정책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정책급여를 제공할 것인가로 접근하면, 일가정양립정책은 가족돌봄의 책임을 갖는 남녀근로자에게 일과 가정생활이 균형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⁴⁾ 일과 가정생활이 균형적이기 위해서는 두 영역에서의 역할수행에서 발생하는 시간압박이나 갈등을 완화(Netemeyer et al., 1996; 장영은 외, 2011에서 재인용)시켜 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일가정양립정책인 것이다.

과도한 역할수행으로 인한 압박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영역과 가정영역 모두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조정이 요구되는데, 일영역과 가정영역에서 역할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일영역에서의 역할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무패턴을 조정하거나 근로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간’을 확보해주어서 가정생활 역할수행에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가정영역에서 역할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가족돌봄이나 가사수행 역할을 축소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4) 정책대상의 일차적 우선순위가 자녀양육기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고 일가정양립정책을 “자녀양육의 책임을 갖는 남녀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정책(홍승아 외, 2009, pp.7)”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는 일가정양립정책 중 전자의 형태를 시간지원정책으로, 후자의 형태를 서비스지원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일가정양립정책 중 시간지원정책의 대표적인 내용은 휴직제도와 근무용통제도이다. 휴직제도는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게끔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이 포함된다. 근무용통제도는 유연근무를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이나 연장근로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12)]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는 최장 90일(산후 45이상)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출산휴가는 최장 5일까지 이용가능하다. 육아휴직은 미취학자녀양육을 가능케 하는 휴직으로서 최대 1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가족돌봄휴직은 최근의 법개정을 통해 포함된 제도로서,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범주에 단순히 자녀양육지원만을 포함하는 기존의 관점을 벗어나 이 범주에 기타 가족원 돌봄이나 일상생활지원도 포함시키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직접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장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정에서 가족원들을 돌볼 수 있다. 근무용통정책은 육아휴직 해당기 근로시간단축지원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케 하며, 시차출퇴근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시간지원정책의 이용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경우 여전히 이러한 정책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다. 출산전후 휴가는 2011년 정규직 여성의 약 63%가 이용한 반면 비정규직 여성은 약 38%만이 이용하였고 비정규직의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율은 이보다 더 낮았다. 이러한 휴가에 대한 급여가 모두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며 2011년 현재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약 37%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 2012; 김은정, 2012에서 재인용).

일가정양립정책 중 서비스지원정책은 주로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특히 미취학자녀 양육 취업여성에게는 보육서비스가 핵심이다. 그런데 서구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여성의 취업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비해(김은정, 2011; 박보영, 2006) 한국의 경우 이러한 취업여성지원 정책으로서의 색채가 보육정책에서 나타나지 못하였다. 초기 보육정책 설계 시 저소득가족 자녀양육지원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보육서비스 지원의 양이나 우선순위가 가계소득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여성에게 오히려 불리한 구조였다(허남재, 석재은, 2011). 보육서비스 중에서 직장보육시설의 서비스나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등만이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지원에 초점을 둔 경우이다.

한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일가정양립 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책은 보육서비스 외에 더 넓은 범주의 가족돌봄서비스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진선미, 장용성, 강은나, 2011). 최근 제도화 되고 있는

노인요양서비스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등은 기혼여성의 가족돌봄과 가사서비스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킴으로써 이들의 일가정양립가능성을 증진시킨다. 주로 30대에 해당되는 미취학자녀 양육기는 자녀양육에 대한 요구 외에도 부모나 여타의 가족원 돌봄 욕구가 발생하는 시기로서, 이러한 가족원 돌봄 요구는 기혼 여성이 일가정을 양립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된다(김영옥, 김영숙, 2011; 유호선, 2008).

물론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의 평균 연령대(주로 30대)를 고려할 때, 부모돌봄보다는 자녀돌봄에 대한 요구로 인해 노동시장참여가 제약되는 상황이 훨씬 보편적일 것이다. 그러나 장애나 질병(노인성 질환 포함)이 있는 가족원 돌봄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김영옥, 김영숙, 2011), 이것이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 가족원 돌봄을 가능케 하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하나로 확립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시간지원정책과 비교가능한 서비스지원정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노인돌봄과 장애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를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3. 일가정양립정책 인지도와 이용의향,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의향 자체를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경험, 이용의향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것이 출산의도나 노동시장진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이혜정과 유규창(2010)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각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일가정양립정책 이용가능성이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지각과 출산율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성호(2012)는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면서 하위 요인으로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가정양립정책 인지도가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규창(2010)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박효진과 은선경(2012)은 일가정양립정책(특히 시간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노동시장재진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다만 휴가정책 중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인지도만이 노동시장재진입을 다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의향의 실태를 파악한 연구들은 다수 있다. 홍승아 외(2009)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 인지도와 이용의향을 조사하고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정책 인지율을 보면 출산전후휴가 인지율 95%, 육아휴직 인지율 86.4%, 배우자 휴가 인지율이 49.4%였고, 이용욕구는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높고, 다음이 휴가제도, 근로시간조정제도 순이었다. 스웨덴

과 영국의 경우 보육서비스, 근로시간조정제도, 휴가제도 순으로 이용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를 보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조정제도에 대한 정책적 선호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성호(2012)의 연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인지율이 44.9%, 육아휴직이 43.7%, 근무단축 혹은 근로형태 유연화가 약 25%정도로 나타나 홍승아 외(2009)의 연구보다 훨씬 낮았다.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홍승아 외(2009)와는 달리 정성호(2012)는 일반 기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07)의 저출산 정책평가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저출산정책의 주요 하위 부문으로 보고, 다른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 효과성 등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주로 휴가지원제도 포함)의 경우 인지도는 약 중간정도에, 효과성 측면은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같은 시간지원정책들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전해정(2009)도 저출산정책의 하위 요인으로 일가정양립정책 인지도와 중요성 등을 평가했다. 육아휴직은 약 85%, 출산전후 휴가는 80%, 보육서비스 약 79%정도의 인지율을 보였다. 일가정양립정책 중 출산후 직장복귀보장,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지원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소수이다. 일가정양립정책 정책이용경험이나 정책효과성, 그리고 일가정양립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만 실증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책인지도나 이용의향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정책이용경험이나 효과성, 그리고 일가정양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관련요인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기혼 취업여성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가치관 요인은 일가정양립 수준이나 만족도, 정책이용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Sutton & Noe, 2005; 한지숙, 유계숙, 2007에서 재인용).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연령이나 교육수준(장수정, 송다영, 김은지, 2009; 진선미, 장용석, 강은나, 2011), 그리고 가치관요인 중에서는 일지향성(한지숙, 유계숙, 2007; 전해정, 한나, 2009)이 일가정양립 가능성이나 일가정양립정책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대체로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지향적일수록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을 이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의 연령이나 특히 미취학자녀의 수는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가능성과 정책이용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장수정, 송다영, 김은지, 2009; 한지숙, 유계숙, 2007). 선행연구에서도 막내자녀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미취학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며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높은 필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의 경제적 수준은 기혼 취업여성이 일가정양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다른 사회적 자원들의 활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larke et al., 2004; 이정은, 2010에서 재인용). 실증연구결과 가계 경제수준은 미취학자녀 양육 가정의 일가정적합성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이정은, 2010).

한편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정책 인지도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수혜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은 대체로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나 빈도, 강도와 같은 구조적 측면과, 생활상의 각 영역별 지원정도를 의미하는 기능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기능적 측면이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기능적 차원의 사회적 지원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기능적 차원의 사회적 지원의 주요 영역에는 정서적 지원, 도구적(신체적)지원, 경제적 지원 등이 주로 포함되는 경향인데(박명화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에 초점을 두고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수혜정도를 주요 변수로 포함하고, 여기에 긴급시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시켰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나 기타 가족원으로부터의 정서적지원 수혜정도(김효선, 차운아, 2010; 박홍주, 이은아, 2004; 최운정, 김계현, 2010; 한경혜, 장미나, 2009)는 일가정양립갈등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한편 자녀양육 관련 실질적 도움을 얼마나 받는지를 나타내는 도구적지원 수혜정도도 일가정양립정도나 출산의도(정혜은, 진미정, 2008)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국가정책적 지원보다 이들을 통한 사적 지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재진, 김은진, 2010; 원숙연, 박지원, 2009).

기혼 취업여성의 직장환경적 특성은 일가정양립 가능성과 정책이용의향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Barnett et al., 1999; Clarke et al, 2004). 선행연구들에서는 특히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 그리고 근무탄력성을 포함한 업무에서의 자율성 정도 등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되었다(이세인, 이숙현, 권영인, 2007; 이정은, 2010; 장윤옥, 정서린, 2012; 한경혜, 장미나, 2007). 한편 직장환경적 특성으로 기업 규모를 고려한 선행연구(한지숙, 유계숙, 2007)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혼근로자의 일가정양립정책 이용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2012년 SSK(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에 거주하며 미취학 자녀가 한명 이상인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일/삶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원자료는 지역별 인구규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막내자녀연령(1~5세),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임시일용직)을 기준으로 1000명의 기혼 취업여성을 할당표집(quota sampling)하여 표본 조사한 것이다. 표준화된 설문지를 활용하되 1:1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2013년 3월 7일~21일까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일/삶 실태조사에서는 미취학자녀 양육 취업여성의 노동생활, 가정생활, 사회적 지원체계의 현황과 의미를 파악하고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인지도, 이용경험, 요구도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이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집된 1000부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측정

1) 종속변수: 일가정양립정책 인지도와 이용의향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의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가정양립정책을 크게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시간지원정책은 자녀양육 시간지원정책(출산휴가정책, 배우자휴가정책, 육아휴직정책), 자녀 외 가족돌봄 시간지원정책(가족돌봄휴직정책), 자녀 및 가족원돌봄 시간지원정책으로 근무유동정책(사차출퇴근정책, 재택근무정책, 유연근무정책)의 7가지 정책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정책 각각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알고 있음(2), 모름(1)의 응답범주로 인지여부를 측정하였다. ‘시간지원정책 인지도’는 이 점수를 합산한 값으로서, 점수가 높아질수록 인지도도 증가한다. 7개 문항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4였다.

서비스지원정책의 경우 자녀양육 서비스지원정책(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보육서비스, 아이돌보미서비스), 자녀 외 가족돌봄 서비스지원정책(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자녀 및 가족돌봄 서비스 지원정책(가사간병서비스)의 6가지 서비스 정책에 대해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서비스지원정책 인지도’는 각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점수를 합한 값으로서, 점수가 높아질수록 인지도도 증가한다. 6개 문항간 신뢰도 계수는 .68로 나타났다.

일가정양립정책 이용의향은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시간지원정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배우자휴가제도가 가능하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유연근무제도와 같은 근무유동증진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각각 질문하여 이용의향 점수를 산출하였다. 서비스지원정책의 경우도 본 연구에 포함시킨 6가지 서비스 정책에 대해 각각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시간지원서비스 이용의향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2였으며, 서비스지원서비스의 경우 .81이었다.

그런데 이용의향 점수의 분포가 연속적이지 않고 이용의향이 높은 집단(평균 '이용할 의향이 있는 편이다' 이상의 점수 값)과 이용의향이 보통 이하(평균 '보통이다' 이하의 점수 값)인 집단으로 범주화 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의 이용의향을 연속변수로 간주하지 않고 이용의향 높은 집단과 이용의향 낮은 집단의 두 개 값을 갖는 이분 변수로 재범주화 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의 인지도와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요인으로 미취학자녀 양육 취업여성의 개인적 특성, 자녀 및 가계경제특성, 비공식관계망의 지원 특성, 그리고 직업환경 특성을 포함시켰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직장생활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는 일지향성 정도, 그리고 교육수준과 연령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일지향성 척도는 강이수 등(2009)에서 작성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질문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점수 값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도구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일자체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준거변수), 대졸이하, 대학원졸 이하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나 수, 그리고 가계경제 수준을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가족적 특성으로 포함시켰다. 미취학자녀의 수와 막내자녀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으며, 가계경제수준은 가정의 경제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는지 주관적인 인식수준을 질문하고 최하(1점)에서부터 중상이상(5점)까지 5개의 단계로 측정하였다.

비공식관계망으로부터의 정서적, 도구적지원 수혜정도와 긴급지원수혜가능성은 사회적 지원의 주요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편, 부모,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정서적지원 수혜정도), 실질적인 도구적 지원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도구적지원 수혜정도)를 각각 5문항과 4문항으로 구성하여 질문하고, 전혀 지원을 받지 않는다(1점)에서부터 매우 지원 받는다(5점)의 5점 척도로 지원수혜정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긴급지원수혜가능성은 자녀가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야근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4문항으로 질문하여 전혀 도움받을 수 없다(1점)에서 매우 가능하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원 정도를 측정하는 3가지 변수는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수혜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취학자녀 양육 취업여성의 직장환경 특성으로는 업무자율성, 근무일수, 근무시간을 포함시켰

다. 업무자율성은 직장생활에서 업무나 작업에 관한 결정권, 작업량 조절의 자율권, 업무시작과 종결에 관한 자율권 등이 어느 정도나 주어지는지를 5문항으로 질문하고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문은미(2004)와 이정은(2010)의 척도를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주당 근무일수와 일 평균근무 시간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가정양립정책 각각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의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 등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사용하였다. 일가정양립정책 중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이 인지도와 이용의향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표본 평균차이검증(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일가정양립을 위한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항 로짓분석(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일가정양립정책 이용의향이 이분 범주변수(이용의향 높음/ 이용의향 낮음)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자료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과 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취업여성의 경우 대졸이 약 65%로 거의 2/3에 해당되며 고졸이하가 약 29%, 대학원졸은 6.5%이다. 연령은 약 80%가 30대이며, 약 15%는 40대, 약 6%가 20대이다. 일지향성의 경우 6~30점까지의 점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평균이 20점(3.63)으로 도구적으로서가 아니라 일자체에 대해 대체로 보통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 및 가계경제 특성을 보면, 막내자녀연령은 1세부터 5세까지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미취학자녀수는 한명이 약 75%, 2명이 약 24%이다. 가계의 경제수준은 중하정도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고, 다음이 중간정도라는 응답으로 전체의 약 39%를 차지한다.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약 80% 이상이 중간정도이거나 중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계경제수준이 하층이라는 비율도

약 12%로 높은 편인 반면, 중상 이상이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5.5%에 지나지 않았다.

비공식 관계망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특성 중 가족으로부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영위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정서적 지원을 어느 정도나 받고 있는지, 정서적지원 수혜정도는 평균이 17.3점으로 대체로 ‘보통’정도 정서적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도구적지원 수혜정도는 평균 10.8점으로 ‘별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거나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한 경우 긴급지원수혜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 약 13.4점으로 대체로 ‘보통’정도라고 응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직장환경 특성을 보면, 먼저 업무자율성은 평균이 약 12.8점으로 ‘대체로 업무자율성이 없는 편이다’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무 일수는 평균 약 5.2일이었으며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약 8시간 30분 정도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빈도(%) 평균(표준편차)	변 수	빈도(%) 평균(표준편차)
개인적 특성		자녀 및 가계경제 특성	
일지향성	20.0(3.63)	막내자녀연령(만)	
교육수준		1세	217(21.7)
고졸이하	286(28.6)	2세	218(21.8)
대졸	649(64.9)	3세	211(21.1)
대학원졸	65(6.5)	4세	177(17.7)
연령		5세	177(17.7)
20대	57(5.7)	미취학자녀수	
30대	793(79.3)	1명	751(75.1)
40대이상	150(15.0)	2명	244(24.4)
비공식 관계망 지원 특성		가계경제수준	
정서적지원수혜정도	17.34(2.51)	최하	17(1.7)
도구적지원수혜정도	10.84(2.20)	하	116(11.6)
긴급지원수혜가능성	13.38(3.20)	중하	420(42.0)
직장환경 특성		중간	392(39.2)
업무자율성	12.73(3.99)	중상이상	55(5.5)
주당 근무일수	5.21(.60)		
일 근무시간	8.25(1.30)		
합계	1,000(100)	합계	1,000(100)

2. 미취학자녀양육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정책 인지도와 이용의향

1) 시간지원정책 및 서비스지원정책 인지도

<표 2>는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인지도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각 정책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1점, 인지하는 경우 2점을 부여했는데, 시간지원정책 중에서는 출산휴가정책 인지도가 평균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출산휴가정책을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아버지휴가제도(평균 1.89)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다음이 육아휴직이었다. 휴직제도 중에서는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재택근무제나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근무용통성 증진 방식의 시간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응답자의 약 50%는 이러한 시간지원정책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표 2〉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 인지도

시간지원정책 변수	평균(총점)	표준편차	서비스지원정책 변수	평균(총점)	표준편차	t 검증
전체 점수	11.94(14)	1.803	전체 점수	10.66(12)	1.516	-7.335***
표준화 점수	8.53(10)	1.288	표준화 점수	8.88(10)	1.263	
자녀양육시간지원			자녀양육서비스지원			
-출산휴가제	1.99	.083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1.73	.442	
-배우자휴가제	1.89	.314	-보육서비스	1.94	.234	
-육아휴직제	1.87	.335	-방문아이돌보미서비스	1.67	.470	
가족돌봄시간지원			가족돌봄서비스지원			
-가족돌봄휴가제	1.51	.500	-노인장기요양서비스	1.85	.358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1.72	.447	
자녀및가족돌봄시간지원			자녀및가족돌봄서비스지원			
-시차 출퇴근제	1.50	.500	-가사간병서비스	1.73	.442	
-재택 근무제	1.69	.463				
-유연 근무제	1.49	.500				

서비스지원정책 중에서는 보육서비스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아서 평균 1.94였다. 다음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인 서비스지원정책사업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평균 1.85)였다. 산모신생아돌보미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중간정도였고 아이돌보미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서비스지원정책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평균값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 평균값을 총점으로 나누어 표준화 값을 산출하였다. 표준화된 점수값들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t-검정한 결과,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시간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2) 시간지원정책 및 서비스지원정책 이용의향

<표 3>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이용의향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지원정책 중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이용의향, 그리고 유연근무, 시차출퇴근, 재택근무와 같은 근무용통정책 이용의향이 평균 약 1.76점으로 가장 높다. 가족돌봄휴직정책에 대한 이용의향도 평균 약 1.74점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시간지원정책 중에서는 아버지 휴직정책의 경우가 이용의향점수가 평균 약 1.57점으로 가장 낮다.

<표 3>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 이용의향

시간지원정책 변수	평균(총점)	표준편차	서비스지원정책 변수	평균(총점)	표준편차	t 검증
전체 점수	6.86(8)	1.212	전체 점수	10.77(12)	1.708	-6.286***
표준화 점수	8.57(10)	1.515	표준화 점수	8.97(10)	1.423	
자녀양육시간지원			자녀양육서비스지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1.76	.428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1.80	.402	
-배우자휴가제	1.57	.495	-보육서비스	1.94	.238	
			-방문아이돌보미서비스	1.82	.382	
가족돌봄시간지원			가족돌봄서비스지원			
-가족돌봄휴가제	1.80	.40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1.76	.425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1.69	.464	
자녀및가족돌봄시간지원			자녀및가족돌봄서비스지원			
-근무용통제	1.74	.442	-가사간병서비스	1.76	.429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이용의향은 고르게 높은 편이다. 가장 높은 이용의향을 보인 서비스는 보육서비스로 평균 1.94점이며, 다음이 아이돌보미서비스(평균 1.82),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평균 1.80) 순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 이용의향도 약 1.76점으로 높은 편이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필요상황이 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69점이라는 평균점도 낮은 편은 아니라고 하겠다. 앞서 정책인지도 차이 분석방식과 유사하게, 정책이용의향에 있어서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값을 총점으로 나누어 표준화 값을 산출하였다. 표준화된 점수 값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t-검증한 결과,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이용의향이 시간지원정책에 대한 이용의향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3. 미취학자녀양육 취업여성 일가정양립정책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시간지원정책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가정양립을 위한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시간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의 개인적 특성이 인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

<표 4> 일가정양립정책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 수	시간지원정책 인지도			서비스지원정책 인지도		
	B	se	β	B	se	β
상수	6.484	.888		7.789	.767	
<개인적 특성>						
일지향성	.059**	.018	.120	.028	.015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	.478**	.139	.127	.218	.120	.069
대학원졸	.808**	.258	.111	.434	.223	.071
연령	.043**	.015	.093	.000	.013	.000
<자녀 및 가계경제특성>						
미취학자녀수	-.074	.128	-.018	.232*	.110	.066
막내자녀연령	-.013	.043	-.010	.028	.037	.026
가계경제수준	.339***	.079	.154	.148*	.068	.080
<비공식적 관계망 지원특성>						
정서적지원수혜정도	.028	.024	.039	.060**	.021	.099
도구적지원수혜정도	.041	.028	.049	.043	.024	.062
긴급지원수혜가능성	.018	.020	.032	-.010	.017	-.020
<직업환경 특성>						
업무자율성	.005	.015	.010	.026*	.013	.067
주당 근무일	.054	.096	.018	.209*	.083	.083
일 근무시간	-.016	.044	-.011	-.185***	.038	-.158
R ²		.143			.096	
Adj R ²		.132			.085	
F		12.608***			8.058***	

()은 준거변수

*p < .05, **p < .01, ***p < .001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도구적으로 보기보다는 일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수록($p < .01$), 고졸 이하 집단에 비해 대졸이나 대학원졸 이상 집단이($p < .01$),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휴가제도나 근무유동제도와 같은 시간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자녀의 연령이나 수와 같은 자녀특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계경제수준은 시간지원정책의 인지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p < .001$). 사회적지원 특성이나 직업환경적 특성도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의 시간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서비스지원정책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시간지원정책인지도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미취학자녀 양육 취업여성의 개인적 특성은 서비스지원정책의 인지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취학자녀의 수와 가계경제적 특성은 서비스지원정책 인지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쳐서 미취학자녀수가 많을수록($p < .05$) 가계경제수준이 높을수록($p < .05$) 정책인지도가 높았다.

비공식 관계망의 사회적 지원 요인 중에서는 정서적지원수혜정도가 서비스지원정책 인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서, 가족 등으로부터 일가정양립관련 정서적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다. 직장환경 특성은 모두 서비스지원정책 인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자율성이 높을수록($p < .05$), 주당 근무일수가 많을수록($p < .05$)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반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p < .001$)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일가정양립을 위한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시간지원정책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5>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시간지원정책 이용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취업여성 개인의 일지향성, 비공식관계망으로부터의 정서적지원과 도구적지원수혜정도, 그리고 시간지원정책 인지도가 이용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일가정양립정책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결과

변 수	시간지원정책 이용의향			서비스지원정책 이용의향		
	B	se	Exp(B)	B	se	Exp(B)
상수	1.586	1.327	4.886	-4.604	1.191	.010
<개인적 특성>						
일지향성	-.101***	.027	.904	-.049*	.023	.952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	.305	.209	1.357	-.182	.177	.833
대학원졸	-.192	.447	.825	-.195	.326	.823
연령		.022	.987	.029	.019	1.029
<자녀 및 가계경제특성>						
미취학자녀수	-.038	.192	.963	.297	.163	1.346
막내자녀연령	-.044	.065	.957	.010	.055	1.010
가계경제수준	.050	.118	1.052	.205*	.100	1.227
<비공식적 관계망 지원특성>						
정서적지원수혜정도	.109**	.037	1.115	.052	.031	1.053
도구적지원수혜정도	-.137**	.041	.872	.152***	.036	1.164
긴급지원수혜가능성	.034	.029	1.035	-.056*	.025	.945
<직업환경 특성>						
업무자율성	.037	.021	1.038	.042*	.019	1.043
주당 근무일	.022	.140	1.022	.033	.123	1.033
일 근무시간	-.088	.065	.916	-.163**	.057	.850
<정책인지도>						
시간지원정책 인지도	-.118*	.047	.889			
서비스지원정책 인지도				.251***	.047	1.286
Nagelkerke R ²		.075		.133		
-2LL		973.821		1263.410		
Chi-Square		49.085***		104.424***		
자유도		14		14		

()은 준거변수

*p < .05, **p < .01, ***p < .001

일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시간지원정책 이용의향이 높은 집단에 속할 승산비가 9.6% 정도 감소하였다(p<.001). 마찬가지로 비공식관계망으로부터 도구적지원수혜수준이 한단계 높아질수록 시간지원정책 이용의향이 높은 집단에 속할 승산비가 12.8% 감소하였다(p<.01). 반면

정서적지원수혜수준이 증가할수록 시간지원정책 이용의향이 높은 집단에 속할 승산비는 1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한편 시간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오히려 이용의향과는 부적의 관련을 맺었다. 시간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한 단계 높아지면 이용의향이 높은 집단에 속할 승산비는 약 7.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2) 서비스지원정책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가정양립을 위한 서비스지원정책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분석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취업여성 개인적 특성 중에서는 일지향성이 유의미한 변수였으며, 자녀 및 가계경제특성 중에서는 가계경제수준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비공식관계망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특성 변수 중에는 도구적지원수혜도와 긴급지원수혜가능성이 서비스지원정책 이용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직장환경 특성 중에서는 업무자율성과 근무시간이 영향을 미쳤으며,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이용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체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수록 서비스지원정책 이용의향이 높은 집단에 속할 승산비는 4.8%정도 감소하였는데($p<.05$), 이는 일지향성이 시간지원정책에 대한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방향이다. 가계경제수준이 증가할수록 서비스지원정책 이용의향이 높은 집단에 속할 승산비는 2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p<.05$).

한편 비공식관계망으로부터의 도구적지원수혜도는 서비스지원정책 이용의향이 높은 집단에 속할 승산비를 16.4% 정도 증가시키는 반면($p<.001$), 긴급지원수혜가능성의 경우는 서비스지원정책에 높은 이용의향을 보이는 집단에 속할 승산비를 5.5%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직장환경 특성 중 업무자율성이 증가할수록 서비스지원정책 이용의향이 높은 집단에 속할 승산비가 약 4.3% 증가하는 반면($p<.05$),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승산비는 약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이 정책을 이용할 의향이 높은 집단에 속할 승산비가 28.6% 정도 증가하였다($p<.001$).

V. 논의 및 결론

일가정양립을 위한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은 큰 틀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지원

해준다는 정책적 목표를 공유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간지원정책이 취업모의 가정노동 가능성을 증진시켜 가정생활 관련 갈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서비스지원정책은 직장 노동의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가정노동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책효과에 차이가 있다.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이러한 지원방식의 차이로 인한 차별적인 정책 효과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일가정양립정책을 가정생활에 요구되는 시간을 지원해주는 시간지원방식과, 노동생활을 위해 가정노동을 서비스로 대체해주는 서비스 지원방식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집단 중 하나인 미취학자녀 양육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정책인지도와 이용의향,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미취학자녀를 둔 취업여성들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정책 중 시간지원정책보다 서비스지원정책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용의향도 더 높았다. 시간지원정책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으며 적용 사업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반면 서비스지원정책의 경우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와 관련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고 대상의 보편화가 진행되면서 제도적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간지원정책 중에서는 과거부터 실행되어 오고 있는 휴가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근무유동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비스지원정책 중에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정책 이용의향 수준도 시간지원정책에 비해 서비스지원정책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간지원정책의 경우 직장생활에서의 불이익 등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이용가능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조주은, 2009; 홍승아 외, 2009) 적극적인 이용의도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배우자휴가에 대한 이용의향이 낮은 것은 실행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되지 않을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결과일 것이다. 반면 서비스지원정책은 그러한 부정적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서비스 이용가능성에 있어서도 제한성이 최근 크게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취학자녀 양육기 취업여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육서비스, 아이돌보미서비스,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

다음으로 정책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별로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 시간지원정책 인지도에는 취업여성 개인의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친 반면, 서비스정책 인지도에는 직장환경적 특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지원정책 인지도는 가계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으며 일지향성이 강한 여성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지향성이 높을수록 현행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주어진 직장환경이 업무자율성이 높고 주당근무일수가 많은 반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길지 않은 여성들에게서 높았다. 하루 노동시간이 긴 취업여성의 경우가 일가정양립정책의 주된 수혜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현행 일가정양립정책의 문제를 드러내 보여준다. 장시간근무를 포함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혼 취업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원 수혜가능성도 동시에 낮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정은, 2010)를 감안할 때 이들 집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체감도를 적극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자녀 특성이나 가계경제 특성이 시간지원정책 인지도와 서비스지원정책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가계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단순히 저소득집단에 대한 정책홍보의 미비문제라기 보다는 시간지원을 통한 일가정양립정책이 주로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거나 서비스지원을 통한 일가정양립정책이 서비스 구매를 위해 추가 비용이 드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실질적으로 저소득집단이 소외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수 있다.

자녀 특성 중 미취학자녀수가 많은 것은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취학자녀수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지원망으로부터의 도움을 연결하면서 자녀양육을 해야 하는 취업 여성들이 보육서비스를 포함한 직접적 서비스지원 정책들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도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취업모의 이용의향이 매우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시간지원정책 이용의향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도구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그러한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 이렇듯 도구적지원수준이 시간지원서비스정책 이용의향과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주변으로부터 자녀양육관련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본인이 직장생활을 쉬거나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가족원을 직접 돌보아야 할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도구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서비스지원정책 이용의향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지원정책 이용의향과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가까운 사람들부터 자녀양육관련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이들의 도움과 연계하여 가족돌봄의 공백을 메워줄 사회서비스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 근무시간이 길면 서비스지원정책 이용의향이 낮아졌는데, 이것은 서비스지원정책이 가족돌봄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주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비공식적 관계망으로부터 자녀양육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근무시간도 너무 길지 않은 경우에는 비공식관계망으로부터의 도움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가능한 가족 돌봄을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자체의 의미를 중시할수록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 모두에 대해서 이용의향이 낮아졌으며, 특히 시간지원정책 이용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낮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기혼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지향성과 가족친화제도 이용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둘 간에 정적인 관련성을 발견한 선행연구(한지숙·유계숙, 2007)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불일치는 연구 대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 이용도와 이용의향 간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연구대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 중 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은, 현행 일가정양립정책에 내포된 직업성취 저해요인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사실상 현행 일가정양립정책이 노동생활의 정규성을 수정하여 가정생활과의 양립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강조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조주은, 2009). 휴직제도나 근무유동제도의 경우 이를 사용함으로써 승진이나 경력개발 기회를 놓치거나 원활한 업무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일지향적인 여성인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성을 크게 인식할 수 있다.

정책인지도와 이용의향 간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이용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활용 가능한 시간지원정책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시간지원정책에 대한 이용의향은 낮은 것이다. 시간지원정책을 인지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현재 이러한 정책이 가진 제도적 미비점이나 활용 시 불이익 등에 대한 인지도 증가와 맞물려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 이용의향이 일가정양립 지원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일가정양립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접근이 개별적 정책사업 하나하나의 특성이나 효과성이나 이용경험, 의향 등에 집중되었던 기존 경향을 탈피하여, 정책적 지원 방식의 주된 차이를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간지원과 서비스지원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의향의 차이가 이들 인구집단만의 특성인지 정책지원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차이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해 차별적인 선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지원방식에 대한 선호도나 관련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2).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 고효정·이은주. (1998). 미취학 자녀를 가진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지원양상에 관한 고찰. 「계명간호과학」. 7(1). 101-116.
- 국회예산정책처. (2007).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
- 김영옥·김영숙. (2011).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 가치 추정. 「여성연구」 80. 181-215.
- 김은정. (2011). 주요 국가의 사회적 돌봄서비스 정책 현황과 특성. 「사회과학연구」. 27(2). 163-186.
- _____. (2012).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목표와 대상 간 정합성 연구. 「가족과 문화」. 24(3). 131-160.
- 김효선·차운아. (2010). 여성근로자의 개인 및 직장 상황이 일-가족 전이에 미치는 영향.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23(2). 69-104.
- 박명화 외 14인. (2009). 「200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박보영. (2006).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가족정책: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상황과복지」. 22. 119-153.
- 박성옥. (1997).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6(2). 37-45.
- 박찬화. (2012). 10개월 이하 영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체계, 자녀가치관 및 심리적 안녕감이 둘째아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1). 95-111.
- 박홍주·이은아. (2004).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가족 경험과 직업의식. 「한국여성학」. 20(2). 141-178.
- 박효진·은선경. (2012).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일가족양립 정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7(1). 5-29.
- 성혜영. (2010). 연장근로에 따른 아동돌봄 형태와 일가족갈등: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9). 79-87.
- 손문금. (2005). 여성의 이중부담과 유급 노동시간의 주변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8(1). 277-311.
- 신혜중·장진경·강유미. (2007). 취업기혼여성의 사회적 지지체계 연구: 서울시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순천향대학교)」. 13(2). 337-368.
- 안재진·김은지. (2010). 미취학아동 가족의 보육, 교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연구」. 79(2). 5-36.
- 원숙연·박지원. (2009). 사회적 지원이 일가족 갈등 및 일가족 축진에 미치는 영향. 「여성학논집」. 26(2). 3-32.
- 유호선. (2008). 노인장기요양제도가 45세 이상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석·장한나·이승연·민연경·최상준. (2012).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인식 조사: 주출산연령 여성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4(2). 29-64.
- 이세인·이숙현·권영인. (2007). 가족의 지원 및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사무직 취업모의 일,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학회지」. 12(3). 29-57.
- 이영환·이수재. (2007).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0(1). 19-25.
- 이정은. (2010).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직장-가정 적합성: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유형분류. 「가족과 문화」. 24(1). 71-104.
- 이혜영·유규창. (2011). 일가정 양립제도와 여성근로자의 지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80(1). 37-79.
- 장수정·송다영·김은지. (2009). 일가족양립정도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복지학」. 61(2). 349-370.
- 장영은·박정윤·이승미·권보라. (2011). 유자녀 취업여성이 경험하는 일-가정 균형에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63-72.
- 장윤옥·정서린. (2012). 가족 및 직업관련 변수가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전이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5). 75-88.
- 전혜정. (2009). 양육부담경감을 위한 다자녀 우대 정책 활성화 방안. 「제 3차 저출산대책포럼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성호. (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1). 31-52.
- 정혜은·진미정. (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47-164.
- 조주은. (2009). 일가정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51호」.
- 진선미·장용석·강은나. (2011).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혼합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의 활용. 「보건사회연구」. 31(3). 38-69.
- 천혜정·한나. (2009). 근로자의 일 지향성, 일 스트레스 및 조직문화가 일과 삶의 조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4). 53-72.
- 최윤정·김계현. (2010). 대졸 기혼 직장 여성의 개인특성, 환경적지지 및 일-가족 다중 역할 갈등 완화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049-1073.
- 한경혜·장미나. (2009). 기혼남녀근로자의 일가족균형과 관련요인: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85-115.
- 한지숙·유계숙. (2007). 기혼근로자의 성역할태도와 일가족 지향성이 일가족 갈등/ 촉진 및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143-166.
- 홍승아·이미화·김영란·유계숙·이영미. (2009).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정책이용실태 및

일가족양립현실. 「한국여성정책원 연구보고서」.

- Barnett, R. C., Gareis, K. C., and Brennan, R. T. (1999). Fit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Hours an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4. 307-317.
- Clarke, M. C., Koch, L. C., and Hill, E. J. (2004). The Work-Family Interface. *Family and Consumer Science Research Journal*. 31. 121-140.
- Netemeyer, R., Boles, J., and McMurrian, R.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Work-Family Conflict and Family-Work Conflict Scal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 400-409.
- Sutton, K. L. and Noe, R. A. (2005). *Family-friendly Program and Work-life Integration: More Myth than Magic?* In Kosseck, E. E. and Lambert, S. J. (Eds.), *Work and Life Integration*.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Do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Recognize and Intend to Us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ime Support Policy and Service Provision Policy

Kim, Eunjeong

This study assumes that recognition of, and intention to us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differs according to the types of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i.e., time/service).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in how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perceive time-support policies, which enable the mothers to directly care their family members, and service-provision policies, which offer the care services on behalf of them.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s they are known to be the source of a high level of demand for work-family policy.

The research findings reveal that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have both a higher level of recognition of, and greater intention to use the service-provision policies than time-support policies.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evel of recognition of time-support policies, while work-related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 recognition of service-provision policies. The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ing intention to use time-support and service-provision policies are also different and especially salient when it comes to social support and work-related characteristics.

[Key Words: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Time-support policy, Service-provision policy,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